



기본소득제, 정말 필요한가?

전삼현(숭실대 법학과 교수)

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현황

김종인 미래통합당 혁신위원장 기본소득 언급 후
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가 **이슈선점 효과**로 재미보고 있음.

- 이재명 지사, 기본소득의 아이콘화
- 박원순 시장, 전국민 고용보험화로 복지의 대변자로 자리매김

- 김종인 위원장, 기본소득제의 어려운 토로 후 미래통합당은 정책 부재당이라는 인상 심화
- 국민들은 기본소득제 시행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

좌파형 기본소득론 핵심

무차별적, 무조건적, 모든 개개인에게 지급하는
기본소득제는 불가능 (알래스카 주 유일 사례)

- 기본소득 도입론자의 대부분은 좌파성향 인사
- 좌파형의 기본소득론은 자원 근거없이 분배방안만 제시
- 프리드만, 토빈 등이 제시한 음의 소득세는 현행 복지체제를 전면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
- 좌파는 “기본소득 + 현형 복지체제” 병행 주장
- 좌파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하는 이유는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

좌파형 기본소득 도입 논거

-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만큼 이익은 N분의 1로 분배 마땅
- 플랫폼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 활용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정당
 -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대량 생산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소득 필요
 - 일자리를 AI, 로봇이 대체하는 만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찾는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필요
- 기본소득 재원은 부유세 등의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일관

우파형 기본소득론의 핵심

- 국가적 생산성제고를 위해 음의 소득세 필요 주장
- 현행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
 - 현행 복지체제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
 - 복지정책 중 공공부조, 사회수당/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됨
 - 사회보험은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됨
 - 중도우파 주도한 핀란드나 스위스 실험은 과도한 기존복지를 대체재로 기본소득을 제시해서 실패한 것으로 추정
- 일률세금제와 면세점 이하 자에 지급하면 기본소득이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재원마련도 가능한지 검토 필요

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적 차이

-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차는 “게으름 vs 구조적 현상”에서 출발.
 -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은 “게으름”의 개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파가 비판
- 핀란드의 경우 근로 고취형 (기본소득 + 근로소득 보장, 복지대상에서 배제)의 기본소득 실시
 - 일자리 증가효과는 미미 (월당 0.3일 증가)
 -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증가 (10% 정도 높음)
- 기본소득을 게으름 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인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.

기술혁신시대와 기본소득의 관계

- 4차산업혁명의 특징, “다품종, 소량생산”
 - 정규직 일자리 축소 불가피
 - 실업원인을 게으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불가피
-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, 상품당 수요자 감소 예상
 - 평생직장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음
 - 알바가 일자의 대세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(청년취향 변화)
 - 알바의 가치에 따라 대기업근로자보다 고액소득 가능
-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기본소득제와의 병행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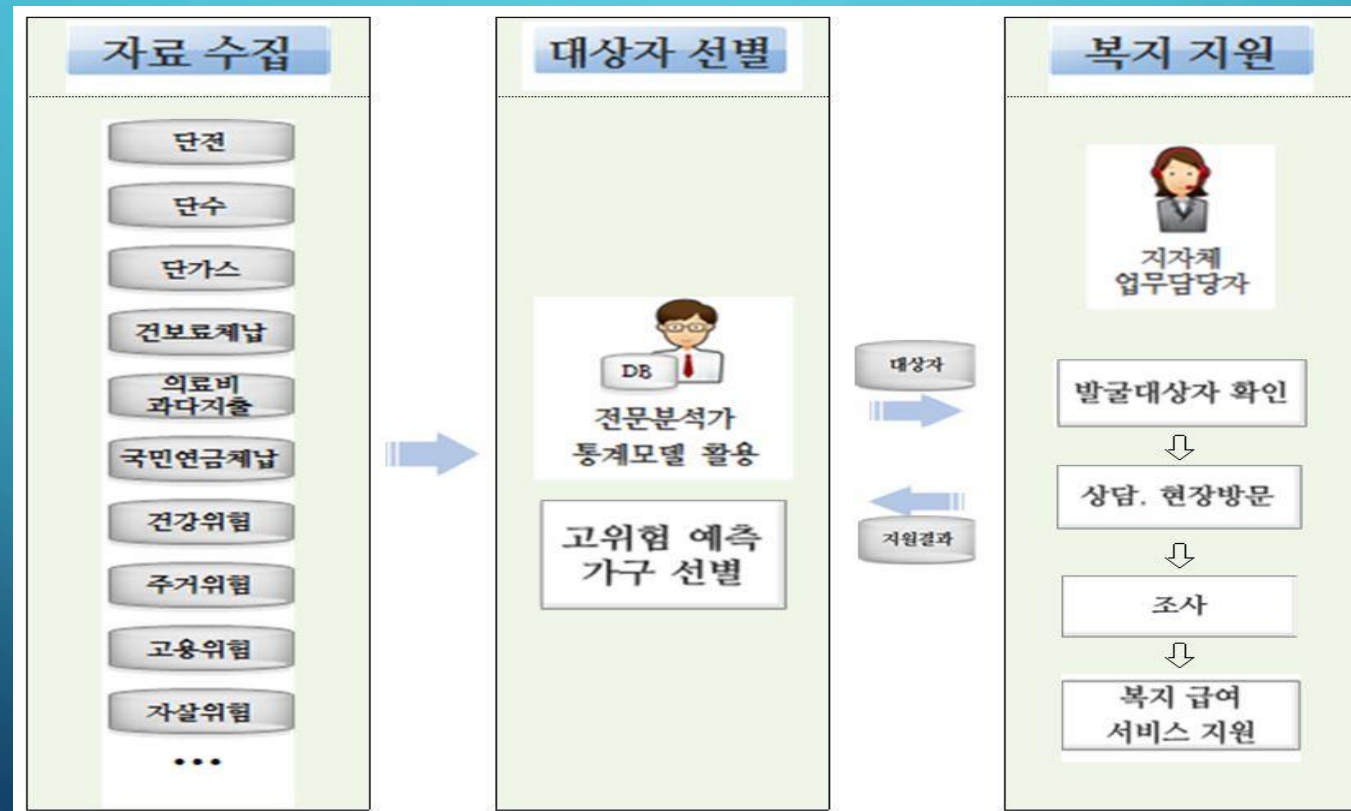


현행 복지정책의 개선 필요성

- 현행 복지수급체계는 신청주의임 (고비용, 저효율)
 - 수급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소극적 경향
 - 한국사회복지정보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시행
- 부정수급자 발굴 비용
- 중복수혜자 발굴 비용
- 복지정책 수립비용



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념적 아키텍처 (보건복지부)



수급 가능 대상자 선별 결과

(2020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)

(단위: 명)

년도	기초연금			장애인연금			장애(아동)수당		
	발굴	신청	지원	발굴	신청	지원	발굴	신청	지원
합계	216,743	140,469	100,695	2,078	320	217(0.6%)	2	0	0
2017	23,065	20,534	18,057	-	-	-	-	-	-
2018	65,590	51,713	43,513	168	38	31(0.0%)	-	-	-
2019	53,446	40,056	28,042	775	200	122(0.0%)	-	-	-
2020	74,642	28,166	11,083	1,135	82	64(2.4%)	2	0	0

복지신청을 안 하는 이유 (%)

구분	복지제도 전반	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대상자가 몰라서	70.9	67.3
신청절차 복잡	13.1	14.0
자녀 등 피해 우려	1.9	5.1
선정기준 엄격	8.8	8.9
사회적 낙인 우려	3.1	3.1
서비스 수준 불충분	0.9	1.2
서비스 비적합	1.3	0.4
합계	100.0	100.0

기본소득의 적정액

-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은 무리
 -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20년 1인가구 기준 105만원 책정
 - 모든 국민 대상, 무조건, 무차별적 지급취지상 최저생계비 보다는 실질적 자유(물질적 자유)보장 정도 최소비용지급

- 기본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의 25% 지급하는데 공감대 형성된 듯 (60만원, 50만원 등)
 - 필립 판 파레이스/야니크 판데르보르트, 21세기 기본소득 (2018년)
 - 스위스: 300만원 (추정치), 핀란드: 월 560유로 (약 71만원), 알래스카: 연 1,606 미달러

- 단일 소득세율 적용, 면세점 이하 자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(물질적) 자유 부여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면 긍정적 검토 가능

유효수요 창출 필요성

- 기술혁신으로 대량생산시 국민들 소비여력 있어야 유효수요창출
 - 유효수요가 있어야 국가생산성 보장
- 공공근로 형태의 신 뉴딜정책은 비효율적
 - 불필요한 공공근로는 정부비용증가는 물론이고 수혜자의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
 - 기본소득으로 공공근로 대체 가능 여부 검토 필요
 - 공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대신 기본소득 대체효과 검토 필요

현행 복지제도의 대체가능성

- 현행 복지제도와의 관계설정
 - 복지에 추가로 기본소득 지급 (X)
 - 복지 전면(공공부조, 사회수당/사회서비스, 사회보험) 폐지하고 기본소득 지급 (△)
 - 사회보험 폐지하고 기본소득지급 (X)
 - 사회수당/사회서비스 폐지하고 기본소득지급 (○)
 - 공공부조 폐지하고 기본소득지급 (○)
 - “사회수당/사회서비스 + 공공부조”폐지하고 기본소득지급 (○)
- 실효성 있는 근로의욕 고취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필요

소 결

- 돈 버는 누군가가 있어야 기본소득 시행 가능
 - 기본소득 시행이유로 좌파는 소득격차 확대 제시 (소득 하향평준화 우려)
 - 일자리가 구조적 문제라면 소득격차 확대는 불가피
 -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기본소득제의 구현 가능
 - 돈 벌수 있는 회사/개인, 더 벌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필요

- 기본소득세를 위한 별도예산의 기금화, 법제화 방안 모색 필요
 - 알래스카주처럼 기금 재정상태에 따라 기본소득도 변동되도록 조정방안
 - 기본소득을 정부가 아닌 독립된 기본소득기금이 주도 모색 필요
 -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 발생시 “면세점 소득액 + 기본소득액” 보장
 - 공공부조와 사회수당/사회서비스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방안 모색 필요 (사회보험은 현행 유지)